

발 간 등 록 번 호

11-1092000-000014-01

# 협업 우수사례집



국무조정실

# 발간사

협업  
우수사례집

가

가

가

가

가

가



국무조정실장 추 경 호

가

가

가

2014년 10월

# 함께 영광 함께 꿈꾸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면 국민 여러분께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협업한 결과가 바로  
고용복지 센터인 것입니다.



## Contents . . .

### 0 I. 국민의 삶이 편리해지는 협업

- 0 • 한곳에서 편리하게! 고용·복지+센터
- 0 • 대학생 주거 걱정 줄이기
- 0 • 유아교육·보육 통합
- 0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허용

### 0 II. 협업으로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 0 • 살기 좋은 농촌 마을 만들기
- 0 • 국민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선 정비
- 0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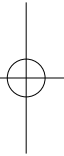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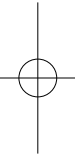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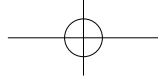
### 0 III. 중기·소상공인이 힘나는 협업

- 0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지원정책 지원
- 0 • 소상공인 상권분석 지원
- 0 •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 0 IV. 행정 비효율은 가라! 유사·중복 잡는 협업

- 0 • ‘지방하천정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
- 0 • 다문화가족정책 실효성 강화
- 0 • 국가표준체계 단일화
- 0 •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청력정보 공동 활용





협업  
우수사례집

# 국민의 삶이 편리해지는 협업

한곳에서 편리하게! 고용·복지+센터  
대학생 주거 걱정 줄이기  
유아교육·보육 통합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허용

# 한곳에서 편리하게! 고용·복지+센터



“고맙습니다. 저 한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노력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저한테 한 20대 여성 A씨가 찾아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됐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이 여성분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저를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털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 2주간 입원하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갔어요. 언니는 직장을 잃은 지 1년이 되었는데도 직장을 못 구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부정수급 담당자로서 A씨에게 지급한 급여를 회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A씨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했고, 바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팀으로 직접 모시고 가서 혹시 이 분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을지 상담을 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자리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A씨가 다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함께 노력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요.

고용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기관이 모여 있다 보니 마음이 상한 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의 진정어린 말씀을 듣고 그런 어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따로 떨어져있었다면 과연 이 분께 이런 마음이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까’라고요. 저에게 고용복지+센터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민행복센터’입니다.(남양주 고용복지+센터 배승렬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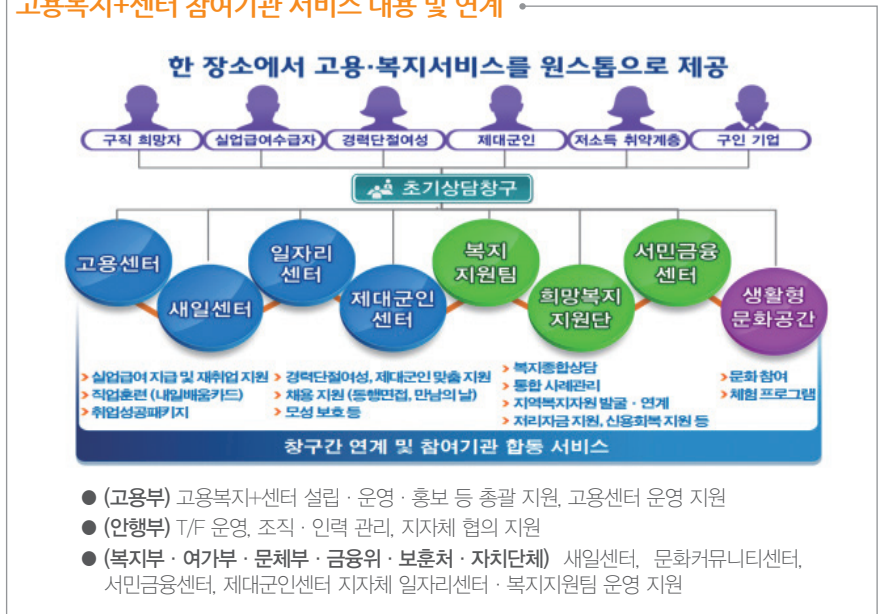


##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을까?

그동안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다양한 서비스 기관이 생겨났습니다.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제대군인지원센터(국가보훈처),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등등. 복지 서비스도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었고, 신용회복을 돕거나 불법사금융 상담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 기관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이 기관들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 중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담이나 서비스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기관 간에도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알지도, 안내하지도 못하여 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서비스 내용 및 연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보니 정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중앙부처가 얽혀 있고, 중앙과 자치단체, 공공과 민간이 섞여 있다 보니 기관 간 칸막이로 인해 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어떻게 하면 국민 여러분께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협업한 결과가 바로 고용복지+센터입니다.

## 전국 최초로 남양주 고용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고용복지+센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11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사회서비스 융합형 전달 모델’로서 고용복지+센터를 제안하였고, 12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고용복지+센터를 확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결실이 금년 1월에 처음으로 문을 연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입니다.

‘첫 번째 펭귄(First Pengu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펭귄들은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입니다. 선불리 들어갔다가는 바다표범이나 물개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바다로 뛰어든 첫 번째 펭귄은 늘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남양주 고용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는 불확실성, 협업보다는 경쟁에 익숙했던 기관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 고용복지+센터는 첫 번째 펭귄처럼 용기를 내었습니다.



<중앙일보>



<연합뉴스TV>



<머니투데이>

남양주 고용복지+센터는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얽혀있는 복잡한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남양주시의 일자리센터와 복지지원팀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일센터와 자활센터는 민간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되다 보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만큼 협업이 절실했습니다.

남양주를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센터 내·외부에서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센터 밖에서는 중앙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과장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면서 남양주 고용복지+센터가 지역 사회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알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표준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 전산망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센터 안에서의 협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참여기관 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주민들이 여러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참여기관의 장이 참석)와 실무협의회(참여기관 실무직원이 참석)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개소 초기에는 소속이 다른 직원이 있다 보니 인사하기도 서먹했고,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해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기도 하고, 전체 직원이 참여한 합동워크숍을 통해 직원 간의 파트너십도 쌓았습니다.



<홍보사례(SBS 생활경제)>



<남양주 합동워크숍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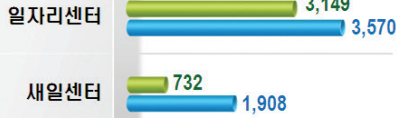


<남양주 채용박람회 보도>

그 결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를 찾는 방문자가 급격히 늘었고, 고용센터·일자리센터·새일센터를 통한 남양주 시민의 취업실적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5점 기준에 4.0점)을 기록하였습니다.

### 방문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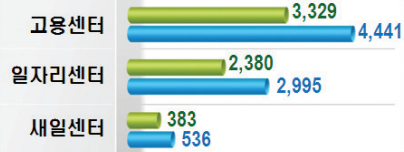
한 번 방문으로  
여러 기관의 서비스 수혜



### 취업성과 제고

■ 13.1월 ~ 7월  
■ 14.1월 ~ 7월

방문자 증가, 서비스 연계 강화로  
취업실적 증가



“아이 데리고 여기 저기 찾아 다니는 게 불편했죠. 하지만 이젠 고용복지+센터에 오면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니까 정말 편리해요.”

30대 주부 A씨



“파트에서 ‘나’ 행사를 하는데, 고용복지+센터에 오면 실업급여도 받고 복지상담, 금융상담도 받을 수 있어서 ‘나2’라 너무 좋아요.”

50대 구직자 B씨

고용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러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서비스 연계가 활성화되면서 성과가 향상되니 덩달아 직원들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일센터가 고용복지+센터에 들어오면서 인지도가 올라가서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은 훨씬 커졌어요.”

새일센터 직원 C씨



“예전에는 복지가 필요해도 ‘주민센터로 가세요’라는 말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민원인도 만족해하시고, 저도 뿌듯해요.”

고용센터 직원 D씨

## | “일자리와 복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일자리와 복지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자’는 고용복지+센터의 설립 취지가 점차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고용복지+센터 한 곳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번 방문으로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편리함은 배가 됩니다. 더욱이 다른 참여 기관의 서비스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해줌으로써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는 ‘일을 통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여 한 장소에서 제공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시키고 고용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탈수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등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활동도 용이해 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복지+센터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보완해 줍니다. 고용센터·새일센터·일자리센터 등이 협업하면서 씨줄과 날줄을 엮듯이 촘촘한 서비스망을 구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참여기관 간 협업을 통해 행정효율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용복지+센터 설립 전후 비교>

	설립 전(개별 기관 체제)	설립 후(고용복지+센터)
서비스 종류	하나의 서비스	고용, 복지, 서민금융, 문화 등 여러 서비스
서비스 경로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한 번 방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ne-stop 구조로 편리
정보 수집	고용서비스 기관 간 분산에 따른 정보수집 비용 대	기관 간 정보 공유, 통합 서비스 페이지 활용 등으로 정보수집 비용 감소
복합 애로자	당사자의 한 가지 애로요인만 해결 가능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한 복합적 애로 요인 해결(사례관리)
행정 효율	기관 별 사업 추진	협업사업 발굴 등으로 효율성 제고

## | 더 많은 고용복지+센터가 국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의 안착을 계기로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고용복지+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협업부처 합동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수요조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금년도 추진 지역 10곳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업부처와 해당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여 부산북부(6.30), 천안·구미(7.7), 서산(7.21) 등에 고용복지+센터가 차례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산은 고용과 복지에 문화가 결합된 최초의 확장형 센터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동두천, 경북 칠곡, 전남 순천과 해남, 강원 춘천에 추가로 고용복지+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70개소의 고용복지+센터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물론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면서 말이지요.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임 없이 고용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고용복지+센터에 참여하는 기관의 모든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의 결실인 고용복지+센터가 확산되어 더 많은 국민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대학생 주거 걱정 줄이기



## 사례

대구 출신 대학생 K씨는 '12년도 대학에 입학하면서 집 문제로 고생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원룸을 구했지만 월세로 45만원을 내야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집안 사정을 알기에 매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월세를 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귀뜸으로 대학생 전세임대 모집 공고에 지원하여 당첨되었습니다. 지금은 방세 11만 5천원에 관리비까지 한달 20만원 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그 시간에 학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골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60~70년대에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소를 팔아야 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학생들에게는 대학을 다니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비싼 주거비용이 큰 부담이 됩니다.



## | 주거 부담은 줄고, 만족도는 늘고 |

학생들이 적어도 집 걱정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가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대학생 전세임대, 공공기숙사 등 니즈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확대하는 것입니다. '12년 8월 물가장관회의를 통해 대학생 주거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작년 5월 '대학생 기숙사 5개년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7년까지 25%의 대학생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공동 목표입니다.

\* ('12년) 수용인원 32만명(20.1%) → ('15년) 수용인원 37만명(23.1%) → ('17년) 수용인원 40만명(25.0%)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로 행복주택의 일부로 연 3천호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사립대 공공기숙사 연 8~10개, 연합기숙사 연 1~2개 등 대학내 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학내 기숙사가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대학생 주거지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5개년 투자계획'에 맞추어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방안을 결정·조정할 기획단 구성하였습니다. 구성원은 국토부 및 교육부 과장과 사학진흥재단 LH공사 등입니다. 2013년 6월 이후 매월 실무회의를 하고, 반기별 1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관 : 국토부)** 임대주택 공급은 국토부 추진, 기숙사 건설 지원 사업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산하 내는 행복주택 사업 시행

**(협조 : 교육부)** 기숙사 건설 지원은 교육부 주도하에 추진

**(협조 : 기재부)** 연합기숙사 부지(국유지) 제공

협의회 및 실무회의에서는 대학생 기숙사 건립 관계기관 추진상황 점검 및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년도 대학생 기숙사 건립 사업은 당초 당초 계획 수용인원 15,396명을 넘어 17,062명으로 약11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4.7월 기준 목표 3,000호의 90%인 2,700호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립대 공공기숙사 용자지원 조건 완화\*를 통해 월 기숙사비 3.4만원 정도를 추가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를 월 평균 24만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주택기금 10년 연장(20년 → 30년),  
 사학진흥기금 2년 ~ 6년 연장(24년~28년 → 30년)  
 사학진흥기금 가산금리 0.5% 폐지

'17년까지 대학생 주거비용을 10만원 이상 절감하여, 대학생들이 주거비용 걱정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개선	
<b>사립대 민자기숙사</b> 월 34만원 수준(2인 1실)  <b>대학가 월세</b> 보증금 500만 ~ 1천만원, 월 임대료 40만원 ~ 50 만원 수준(서울)	➔	24만원(2인1실)	사립대 공공기숙사
		10만원 이상	국립대 BTL 기숙사
		7만~17만원, 보증금 100~200만원(1인1실)	전세임대
		4만~9만원, 보증금 100만~200만원(2인1실)	
		15만원(2인 1실)	학생종합복지센터



### <2014년도 행복(공공, 연합)기숙사 개관 사례>

구분	학교명	전경사진	개요
공공 기숙사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 운영 중(2014.3~ ) ▶ 928명 수용 ▶ 지상10층
	대구한의대학교		▶ 운영 중(2014.3~ ) ▶ 402명 수용 ▶ 지하층, 지상5층
	경희대학교 (이문동)		▶ 운영 중(2014.3~ ) ▶ 73명 수용 ▶ 지하층, 지상7층
	경희대학교 (회기동)		▶ 운영 중(2014.3~ ) ▶ 51명 수용 ▶ 지하층, 지상5층
	충북보건과학 대학교		▶ 운영 중(2014.3~ ) ▶ 230명 수용 ▶ 지상6층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		▶ 운영 중(2014.3~ ) ▶ 102명 수용 ▶ 지하층, 지상4층
연합 기숙사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 운영 중(2014.9~ ) ▶ 516명 수용 ▶ 지하층, 지상7층

# 영유아 보육과 교육 통합

## | 우리 아이 어디에 맡겨야 하지요? |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나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가 다니는 돌봄시설에 대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가 다양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학부모들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돌봄시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디에 보낼지 큰 고민이었습니다.

'13년 영유아부모 1,500명 설문조사 및 각종 간담회를 통해 들을 수 있었던 학부모와 원장·교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학부모 의견

“가고 싶은 시설은 대기순번이 길어요. (질적으로) 부족한 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는 않죠.”('13.5월, 현장 간담회 등)

“어린이집·유치원 평가시 안전이나 교사의 질도 함께 관리되었으면 좋겠어요.”('13.12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별 특성이 있는데 똑같은 잣대에 맞추게 하는 것은 세계 추세에도 안 맞습니다. 다양한 시설을 두고 학부모가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13.8월, 원장·교사 간담회)

학부모들은 집 가까운 시설에서 비용부담 증가 없이 양질의 교사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고, 교사의 자질이나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아이사랑보육포털(어린이집) 유치원알리미(유치원) 사이트는 필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 | 학부모 수요에 맞춘 유아교육·보육 통합 |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 관리부처를 통합하고, 영유아들이 어디서든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조실·교육부·복지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13년에 학부모 및 보육원·유치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부모의 요구가 큰 교육·보육과정의 서비스 질 향상 우선 추진' 및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은 다양한 형태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1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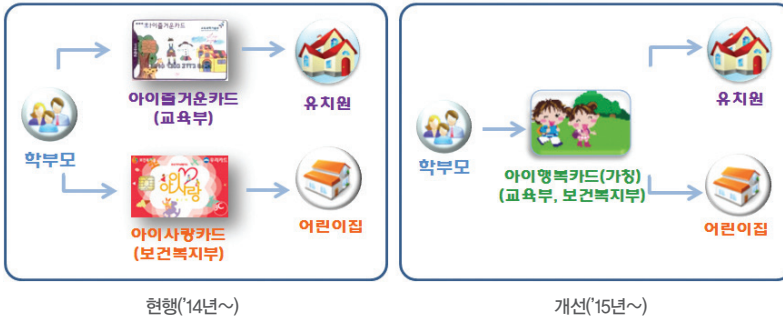
### 유보통합 단계별 추진방안

- 1단계 : 정보공시, 평가연계, 재무회계, **결제카드 통합**
- 2단계 : 운영시간, 교육과정, 가격규제, 시설기준, 지원방식, 교사질제고
- 3단계 : 교사처우 격차해소, 관리부처·법률 통합 및 재원 통합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위해 '14년 2월에는 국무조정실 내에 유아교육보육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그 첫 단계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의 아이사랑카드(보육료 결제), 교육부의 아이즐거움카드(유치원비용 결제)로 결제카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어린이집 간 시설 이동시 카드 교체 등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3년에 유아학비에서 보육료로 변경하거나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가 총 267천명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은 것이지요.

4월부터 7월까지 지원카드 통합 유보통합추진단, 복지부-교육부 간의 카드통합을 위한 추진 관련 실무회의 및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안) 확정되었습니다. '15년부터는 하나의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6만명의 학부모가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어린이집 ↔ 유치원간 이동하는 영유아 267천명 카드 발급 비용 1,335백만원 가량이 절감될 것입니다.

\* 267천명('13년 기준) × 장당 발급비용 5천원 = 1,335백만원

유보통합이 완료되면 학부모 들은 원비, 프로그램 및 교사, 급식, 통학차량 등 알고 싶은 정보를 통합정보포털에서 쉽게 비교한 후 시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평가, 어린이집 평가 확대로 시설간 서비스 질 격차 축소될 것입니다. 안전, 교사의 질도 함께 관리하게 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지요. 0~2세 아이도 유치원 이용이 가능해지고, 반일제 · 시간제 등의 보육지원으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허용

## |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국가보훈서비스의 격차 발생 |

### 사례

월남에 파병돼 파편을 맞은 김 모씨(69세, 남)는 지난달 대학병원에서 왼쪽 허벅지에 박혔던 파편 제거수술을 마쳤다. 전쟁이 끝난 지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김 씨에게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나마 파편은 제거라도 할 수 있지만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양쪽 청력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상이등급 3급이 내려지고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 지원금도 받고는 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아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가 녹록치 않다. 이럴 때 사는 곳 근처 청각장애인복지관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같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정보도 교류하면서 보다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다.

위 사례에서처럼 현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상이자임에도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일반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 등록 시에는 그 하위법령(시행령)으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일관성 결여에 대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2000년부터 일반 장애인복지는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보훈처가 전담하는 것으로 정책고객을 이원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따라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점진적으로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국가보훈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정체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 현재 국가유공상이자 복지서비스는 40여종인데 비해, 일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80여종

예를 들어 대중교통 및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때 중증장애인에게는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해서도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 또는 감면해 주고 있지만, 동일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는 본인에 한해서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등록 허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2009년부터 유공상자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보편적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령 관련 조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제1항**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동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 :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정책대상의 차이, 예산배분 합리성에 대한 고민

동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자 부처간 입장차이가 첨예했던 사항은, 과연 국가유공자를 일반 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래,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장애인등록제도가 시행(88)되기 훨씬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실시되었고, 이러한 지원에는 국

가유공자의 공헌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의 저하 및 노동력 상실, 즉 장애에 대한 국가적 보상까지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의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를 나누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보편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기여도와 신체상이 정도에 따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보편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예산 배분의 합리성 차원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개발·확대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수 차례의 회의 끝에 보훈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기로 합의('09)하고 합의내용을 반영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안('10)하게 됩니다.

## 재입법예고와 논의의 원점 회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중복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제한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한편 보훈관련 타 법령의 제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1.9월)으로 이에 대한 사항도 반영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보훈서비스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허용됨으로써 확대되는 예산 등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반영한 재입법예고(제2차, '12.4월)를 실시하였습니다.

\* (재)한국장애인개발원(2010).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에 따른 서비스 조정 연구

그러나 최초 2009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방향 및 담당 실무자의 변경 등으로 동 개정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개정 절차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논의는 원점으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관련 당사자, 특히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대표적인 보훈단체의 항의 및 민원이 지속됐고 부처간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양 부처는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합목적적인가라는 당초 논의의 시발점에 발이 묶인 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1년여의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 및 갈등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머물자, 양 부처는 동 사안을 국무조정실의 중재 하에 부처간 협업과제로 상정(13.5월)하기에 이릅니다.

## | 부처간 공감대에 기반으로 장애인 등록 허용 |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동 과제 해결을 소관부서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재개하게 됩니다. 우선 지난 3년여의 기간동안 두차례의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직접적인 기대이익을 충족시켜야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과제추진의 장기화로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함으로써 부처간 갈등을 시급히 해소해야만 했습니다.

양 부처는 과제추진의 필요성 등 2차 입법예고시까지 합의했던 기본적인 내용을 유지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우선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에 대해 부처간 공감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 분야별 담당 사무관 회의를 개최(13.8월)하여 약 40여종의 국가보훈서비스와 약 80여종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사업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비교·분석함으로써 이제까지 다소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중복 및 지원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여 공공 및 민간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취업지원 등 총 8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보급, 의료비·자녀 교육비 지급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동일·유사한 복지사업으로 규정하여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했을 때 기존 상이등급을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판정체계 내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습니다. 양 부처는 현행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판정기준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상이등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등급체계와는

별도로 일반 장애인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심사를 거친 후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부처간 최종 합의사항을 반영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동 내용에 대해 재차(3차) 부처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13.12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난관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및 소속회원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 국가보훈처와의 합의내용에 대해 이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장애심사 없이 기존 상이등급에 대한 확인만으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상이등급체계 및 기준이 장애등록체계 및 장애심사기준과 상이하므로 양쪽 등급 간 일률적 호환은 불가하다는 원칙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양쪽 기준 중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갖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상이정도가 장애심사기준과 일치하는 경우 장애심사 없이 기존 신체검사의사소견서의 상이등급 분류번호를 확인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8월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6개월 경과 기간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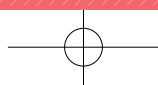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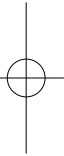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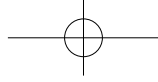
##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허용의 기대효과 |

따라 향후 총 12만명에 달하는 국가유공상이자 중 약 2만 3천여명이 장애인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경우 현재 국가보훈서비스 외에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상이정도가 장애심사기준과 일치하는 약 9천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애심사 없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들이 큰 불편없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가유공자들의 오랜 기간 숙원과제이자 무려 5년여 동안 진행된 부처간 협업과제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과제가 완료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지만 결국 소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부처가 처한 입장보다는 관련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

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끊임없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처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부처가 처한 정책환경 등을 이해시키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는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제도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유공상이자를 비롯한 등록장애인의 편의제고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협업  
우수사례집

# II 협업으로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농촌 마을 만들기  
국민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선 정비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농촌에서의 삶'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농촌마을의 푸근한 인심, 아름다운 자연 등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촌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농촌의 주거·교통 등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고령 어르신들은 복지·의료·문화 등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보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협업을 통해 농촌 공동시설을 활용한 보건·복지·문화 서비스 제공, 교통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확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에너지 확충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협업 STEP 1 :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

첫 번째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홈 등으로 활용하는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14.8월 기준으로 공동생활홈 34개소, 공동급식시설 26개소, 작은목욕탕 1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지원하는 국민디자인단에서는 공동생활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방법 안전센서 설치 등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는 개선된 공간에서 '건강 100세 노인운동 서비스',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등 어르신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위생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생활과 상호 연대를 통해 외로움과 불안감을 줄여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고독사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부처간 협력을 통해 동일한 정책 수요자(농촌 어르신)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전달 창구를 통합하여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김제시 금산면 봉은마을 이장은 평소 경로당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활용도가 낮아 고민하던 차에 농식품부의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 사업 공모를 김제시를 통해 알게 되었고, 공모에 신청하여 공동생활홈 대상지로 선정되어 마을주민들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마을 내 독거노인들의 숙식 제공, 고독사 예방 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완공되면 보건소 및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생활체조(요가) 및 개인별 건강체크 서비스를 통해 건강 관리토록 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 | 협업 STEP 2 : 농촌 교통 서비스 지원 |

두 번째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소개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지하철, 택시 등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고 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인구가 줄면서 버스마저 끊기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복지·문화 등 공공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배후마을일수록 대중교통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 전국 행정리(36천개) 중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3,4천개 행정리(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지자체·주민이 협력하여 농촌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교통이란 경제성이 낮거나 진입로가 좁아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소형버스, 택시를 활용하여 기존의 버스노선을 보완하는 준대중교통입니다.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역할분담

- (사업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사업시행) 농어촌희망재단 (사업 세부시행 : 조례제정, 운영관리 및 협의체 구성 등) 지자체
- (교통서비스) 주민 거버넌스의 운행계획 수립·운영으로 관계부처 협업 및 민·관 협치

올해 초 총 13개소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4개소(춘천, 부안, 의성, 무안)에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주민회, 작목반 등이 교통서비스 운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주체가 되어 커뮤니티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은 2년간('14~'15) 차량유지·보수, 운행손실보상, 유류비 등 교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위해 올해 1월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5.1.29 시행)을 하였고, 현재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225개 마을 주민 26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 분	시·군
버스형(6)	양평군, 춘천시, 완주군, 순천시, 예천군, 울진군
택시형(7)	안성시, 부안군, 완주군, 무안군, 의성군, 성주군, 함양군

### (지역 교통모델 사례①)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 마을버스

- (운영주체) 조교리작목반영농조합법인
- (운영내용) 춘천시의 소양강댐 건설로 교통오지가 된 지역인 조교마을(북산면 조교리)에서 11인승 소형승합차를 구입하고 마을주민이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운행(일/3회)
  -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의 실생활권인 홍천군 두촌면까지 14km 구간 왕복
  - 이용요금은 1,000원이며, 농식품부가 차량 유지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 교통모델 사례②) 의성군 행복택시

- (운영주체) 의성군 및 해당마을
- (운영내용)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담당 택시를 지정하여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월/6~8회)
  - 대상마을은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50개 마을
  - 이용요금은 1인당 버스기본요금(1,200원)이며 농식품부가 요금차액 등 지원

(의성군 행복택시 이용자 반응)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거주하는 A씨, 면 소재지 불일보기가 힘들었으나, 행복택시가 생겨서 “장날에 짐이 많은데 너무 편해”라는 반응

※ 8.7일 안동MBC

## | 협업 STEP 3 : 농촌마을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세 번째로 농촌마을을 찾아가 의료·문화·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 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농촌은 취약한 인프라로 불편한 점이 많지만 특히, 적은 인구가 넓은 면적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특성 상 공공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들이 주로 군(郡)이나 읍(邑) 소재지 등에 집중되어 있고 도시와 달리 대중교통 여건도 취약해 서비스 접근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과 도시 간 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협력하여 문화나 의료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이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간벽지의 농촌 마을로 직접 찾아가 각종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 농업인 행복버스 역할분담

- (사업주관) 농식품부, (사업연계·수요발굴) 농협중앙회, (사업시행) 지역농협
- (행복버스 서비스) 산간오지 농촌마을에 행복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농업인 행복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 단위 지역이지만 의료기관이 보건진료소 뿐인 면 단위 농촌 마을에서 시내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의료장비를 대동한 의료진들에게 문진부터 엑스레이·초음파 촬영 등의 의료 검진, 물리치료 등 윈스톱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평소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과 선풍기 어려운 장수사진과 가족사진 촬영, 문화예술 공연, 차량이나 가전제품 수리까지 농업인 행복버스는 골칫거리와 해묵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행복버스 현장까지 농촌 주민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게끔 농협에서는 이동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올해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은 작년 9

회에서 50회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3.21일 출범식과 함께 시작한 농업인 행복버스로 50개 농촌지역의 5만여명이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행복버스 운영을 통해 농촌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 3.21 농업인 행복버스 수혜 현황(약 1,000여명)

- 무료 의료지원(300명), 장수사진 촬영(135명), 법률 상담(30명), 문화예술공연(250명), 자동차·가전제품 무상수리(80명), 초음파 진단(137명) 등

※ 상반기 실적 : 의료지원(6,334명), 장수사진(3,101명), 문화예술공연(3,410명), 법률상담(475명), 이미용 무료 봉사 등

(농업인 행복버스 관련 반응)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거주하는 A씨, “나이가 드니까 허리 등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오늘 물리치료를 받아보니 아주 시원한 느낌”, “농업인 행복버스의 행사 내용이 아주 만족스럽다”, “시골일수록 대중교통망이 부족한데 ‘농업인 행복버스’처럼 찾아오는 복지서비스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9.2일 문화일보

# 도시미관 개선과 국민 안전을 위한 공중선 정비 협업



쌀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유모(55,여)씨는 “전선들이 엉망이었던 때는 미관도 문제긴 했지만 천둥번개가 치는 날이면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무서울 때도 많았다”며 “정비를 시작한 뒤부터 시장 분위기도 훨씬 좋아지고 안전 걱정도 하지 않게 됐다”

만화가게를 하는 이모(50,여)씨도 “가게 앞에 똑 잘린 전선이 덜렁덜렁 내려와 있어 아이들이 다닐때마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가 컸다”며 “이렇게 치워주니 이제 한시름 났다”고 말했다.

‘13.10.1 아시아경제 “거미줄같던 공중선 정비후, 달라진 시장 가보니”



전주 위에 얽히고 설켜 있는 전력·통신·방송케이블선(이하 ‘공중선’)은 보기에 안 좋을 뿐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전주 도괴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래부, 산업부 등은 지자체·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았던 공중선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얽혀있던 공중서를 협업 통해 말끔히 |

2012년 이전까지 전주위에 난립된 전력·통신·방송케이블(이하 ‘공중선’)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자(한전·방송·통신사)별 무계획적인 정비로 그 효과가 적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11월 관계부처(舊 총리실·방통위·지경부·국토부) 합동으로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이 기존 공중선에 대해 난립선, 여유장, 인입선 등 유형에 따라 정비를 하고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선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공중선의 지중화시설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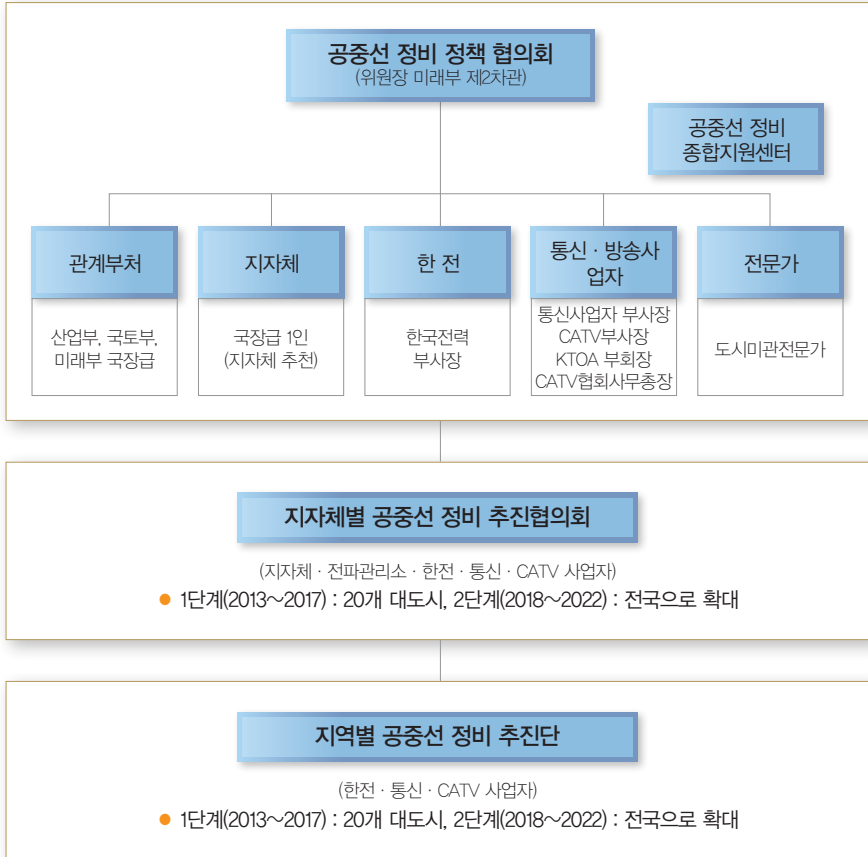
- ※ 전국의 공중선(전주 위에 난립된 전력·통신·방송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 1단계(‘13~’17년, 5년)에는 인구 50만 이상인 20개 대도시의 공중선을 우선 정비하고, 2단계(‘18~’22년, 5년)에는 나머지 중·소도시 지역을 정비 계획
  - 미래부와 산업부는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이에 2013년 1월부터는 미래부·산업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미래부 제2차관 주재)’ 및 ‘지역별 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관계기관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 공중선 정비 관계기관간 역할분담

- (미래부) 공중선 정비계획 수립,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업 총괄
- (산업부) 가교배전선로의 전력선의 지중화 확대방안 마련 및 전력선 정비 지원
- (국토부) 공중선의 지중화 유도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방안 마련
- (지자체) 공중선 실태조사, 정비지역 선정, 정비결과 점검·확인 등
- (정비사업자) ‘13~’17년(5년)간 20개 도시에 1.5조원을 투자하여 공중선 정비

공중선정비 정책협의회는 공중선정비 종합계획 심의·추진상황 점검·제도개선방안 협의 등 공중선 정비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공중선정비 추진협의회는 정비 대상지역 선정(안) 마련 및 정책협의회 상정 등 지역별 정비 수요조사와 정비실적 확인감독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2013년 공중선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지자체·정비사업자가 협업하여, 20개 도시내 145개 구역 정비에 민간자본 3,55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는 3,284억원(공중선정리 2,233억원, 지중화사업 1,051억원)을 투자하여 20개 도시내 203구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의 공중선이 정비되면 도시미관도 개선되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해소될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공중선 정비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도 작지 않다고 합니다.

5년간('13~'17년) 공중선 정비 투입재원(1조 5천억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년 1,789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까지는 민간자본 2,00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왔으나, 2013~2017년까지는 매년 1,000억원이 증가한 3,000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 연간 투입 인건비(752억원) / 공중선정비 관련직종 일일시중노임평균(168,822원) / 연간 근무일수(249일) = 1,789명

※ 서울을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20개 대도시에 난립한 공중선을 발견하면 콜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 1588-2498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경기도 성남에 사는 A씨는 최근 냉장고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전에 있던 냉장고가 고장난 것은 아니지만, 크기도 너무 작고 사용한지 10년이 넘어 에너지 효율도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쓰던 냉장고를 버리자니 너무 덩치가 커 어떻게 버려야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이웃주민이 놀러 와서 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해 준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한 후 이를 뒤 집에서 편안하게 냉장고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 | 천덕꾸러기 폐가전제품 |

냉장고 등 폐전자제품이 적정하게 수거되지 못하고 부적정 처리시 환경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인 냉매(CFCs)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합니다. 반면 철·희유금속 등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 잘 회수될 경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체계가 미흡하여 수거·재활용량은 저조하였습니다. EU와 비교하였을 때 EU의 경우 2008년 기준 1인당 6.3kg의 재활용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1인당 3.12kg이 재활용되었을 뿐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직접 수거하는 체계가 미흡하여,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 배출시 운반이 어렵고, 스티커 비용 등으로 버리고 싶어도 쉽게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불편 탓에 폐제품이 비제도권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유기물 위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및 청소행정 부담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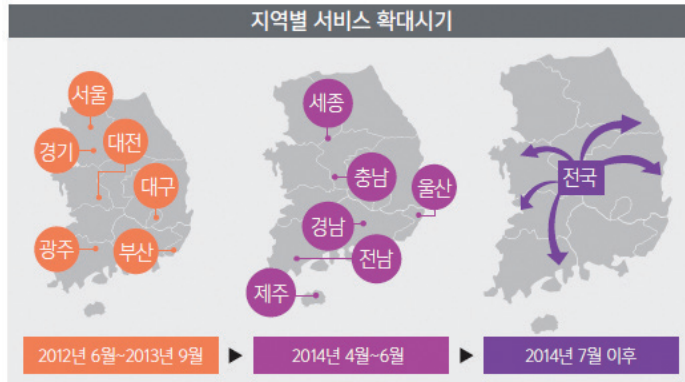
## | 무상방문 수거를 위한 환경부-지자체-생산자 간 협약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2013년 2월부터 폐가전제품의 무상 방문수거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지자체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에는 특·광역시 및 경기도 대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천·울산을 제외하고 대구(13.4), 대전·경기(13.6), 부산(13.7), 광주(13.9) 등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작년 5월에는 환경부-지자체-생산자 간 무상 방문수거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기본 방향은 대형 폐전자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방문수거함으로써 재활용 확대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맞춤형 수거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13년에는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하였으며, '14년부터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9월 이후에는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14년 무상 방문수거 전국 확대 추진>



※ '14. 9월 현재 16개 광역 시·도 추진중, 인천시 9.15일 시행예정

협업으로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의 프로세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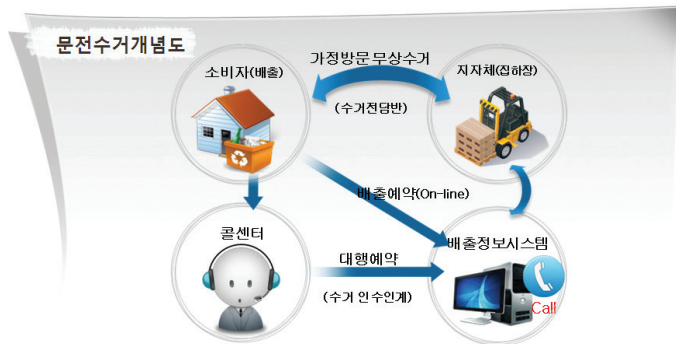
무상수거 대상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29인치이상) 및 1m 이상 제품입니다. 대형가전 배출시 소형가전도 병행 수거한다고 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시스템을 위한 주민-정부-생산자의 역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주민	지자체(환경부)	생산자(협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 배출예약 (예약시스템/콜센터)</li> <li>폐제품 인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 홍보 및 안내</li> <li>지자체 참여 협조 요청 및 행정지원 (기존계약업체 관계등)</li> <li>집하장 제공 및 폐제품 적재 지원</li> <li>EcoAS 등록관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거체계 구축 (예약시스템, 지자체별수거팀등)</li> <li>통합운영관리 (예약시스템, 콜센터, 물류)</li> <li>적재 기자재(파렛트) 지원</li> <li>운반 및 재활용 처리</li> </ul>

무상 방문수거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폐가전제품 배출시 온라인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배출 등록 → 수거 · 운반 전담반 수거 → 재활용 센터(Recycling Center) 등에서 재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 예약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인터넷 및 콜센터를 통한 사전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거된 폐가전은 재활용센터로 인계되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 < 무상 방문수거 개념도 >



## | 편리함도 환경 보호도 돕는 무상 방문수거 사업의 효과 |

'13년 6개 광역 시 · 도에서 무상 방문수거 사업 시행결과 국민의 53%가 무상 방문수거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 40억원의 배출수수료 면제효과가 기대되며, 그간 폐가전제품 운반 등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실제로 무상수거 서비스를 받았던 주민 중 '13년 99.6%, '14년 상반기 기준 99.8%가 만족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13년 무상 방문수거에 따른 폐가전제품 수거량은 약 16만 2천대로 사업 시행 전에 비해 시 · 도별로 5~7배의 수거량 증가를 보였으며, '14년 상반기 6개 시 · 도 추가 참여(4월 5개 시 · 도, 6월 울산 추가 참여) 결과, 수거량은 11만 8천여대로 '13년 동기간 대비 수거량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35만대의 폐전자제품 재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14년 9월 3개 도서(울릉, 신안, 완도)를 시작으로 민·관·군 협의를 통한 '폐가전 해상수거체계'를 구축하여 도서지역 무상수거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15년부터는 전 도서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서지역 캠페인은 환경부, 해군본부, 지자체,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전자제품 제조사 등이 해군 및 민간선박을 이용하여 도서에 적재된 폐가전제품을 육상으로 이송하여 인근 재활용센터로 이송·처리하고, 동 기간에 제조사에서는 전자제품 무상A/S 지원 및 가전제품 증정행사 등의 내용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 <도서지역 폐가전 처리지원 개념도>



도서지역은 수거물량 대비 물류비용이 과다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무상 방문 수거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모든 국민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리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도서지역 주민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15년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서지역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캠페인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업  
우수사례집



# 중기 · 소상공인이 힘나는 협업

중소기업 지원, 효과는 Up! 낭비는 Down!  
소상공인 상권분석 지원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 중소기업 지원, 효과는 Up! 낭비는 Down!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관리하던 중소기업 지원이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업측면에서는 정부기관이 하나다 하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정부측면에서는 체계적으로 지원사업 성과를 관리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청 담당자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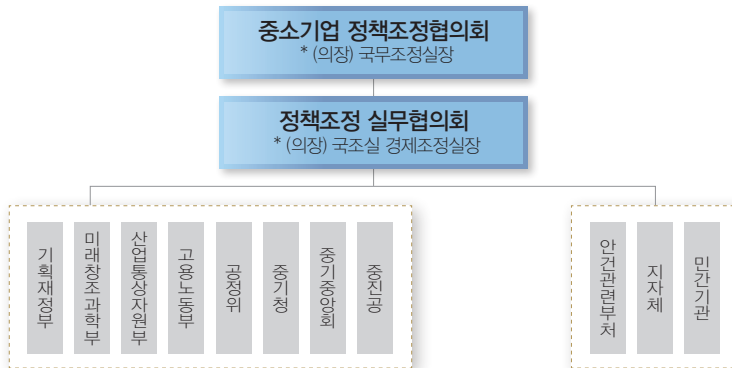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많이 늘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중소기업을 성장을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큼니다. 이에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12년 12.3조에서 '14년 13.6조원 규모로 지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지원규모만 커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정말 필요한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부 기업이 중복 지원을 받아 **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이 각 부처·지자체에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지원했던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박근혜정부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13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13년엔 중기청 및 중앙부처 금융·기술분야 104개 사업별 이력정보(지원일, 지원금액 등) 및 수혜기업 기본정보(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업종 등)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 1단계로 구축되었습니다.

'14년에는 시스템 운영, 신용정보 취급 및 과세정보 수집·처리 등을 위해 「중소기업 기본법」 제20조의2를 신설('14.4월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수출판로, 인력 등 분야 및 각 시·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가 연계하는 2차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시스템 1차구축이 완료된 후 '14.6월기준 175만건, 159조원, 103만개 수혜기업 정보 관리중입니다. 또한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협조를 통해 수혜기업 과세정보(장업일, 폐업일, 매출액) 및 고용인원(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을 확보하여 수혜기업 경영실적 분석 등에 활용중입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창조경제의 시대

SM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정책지도 | 이력현황 | 쓸림검증 | 경영실적 | 통계 | 이용안내

정책지도: 정책 안내에 보기  
이력현황: 기업별 지원현황 보기  
쓸림검증: 쓸림유해 기업별 보기  
경영실적: 참여기업 경영지표 보기  
입력관리: 연계/입력

기업검색 | 사업검색

1. 사업자번호  
2. 기업명  
3. 지역: 전체

지원예산 중앙/지자체

연도	2011	2012	2013
예산 (조원)	120,405	129,979	129,710
지자체 예산 (조원)	21,402	22,112	20,752
총 예산 (조원)	99,003	100,867	108,958

공지사항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테스트 안내	2014-01-08
2014년 1월 2일(목) 서비스 점검으...	2014-01-02
시스템(장해, 연계 등) 안내 합니다.	2014-01-02
기관별 사용자 ID 발급 절차 안내	2013-12-30
사용자 인증서(GPKI, NP키) 등록...	2013-12-28

- 정책(사업) 검색
  - 중앙부처,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검색·조회
- 참여이력 조회, 중복여부 검증
  - 기업별, 사업별 참여이력 및 쓸림 지원여부 검증
- 지원효과 분석
  - 정부 사업 참여기업의 성장경로 및 지원이후 경영지표 변화 분석
- 입력관리
  - 대량 정보 자료의 입력 및 데이터 연계현황 모니터링

앞으로 '15년 3차까지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연간 약 13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원배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별체계를 개선하고 특정기업 과다·쓸림 현상을 방지하여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 극대화하고, 지원이력 DB를 통한 기업특성별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신청창구 통합을 통한 중소기업 편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혜기업 성장경로 등을 분석하고 이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 수립시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사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중소기업 정책정보 가이드북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도 막상 중소기업이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 CEO들이 “이런 정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지원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정책 인지도

\* 14개 부처에서 200개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13년 11조원) 운영

\*\* 중소기업의 정책인지도 24.1% (중기청, '13)

중소기업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인 기업인 및 중소기업 단체, 정책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및 지원기관 등 민·관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정책가이드북에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12개 관계부처의 100개 핵심 정책정보를 수록했습니다.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정책포털인 기업마당(www.1357.go.kr)을 이용한 정책 수요자인 기업의 니즈(needs) 분석을 토대로 14개 정부부처\* 정책 담당자 검토를 거쳐 엄선되었고, 12개 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록내용을 작성·보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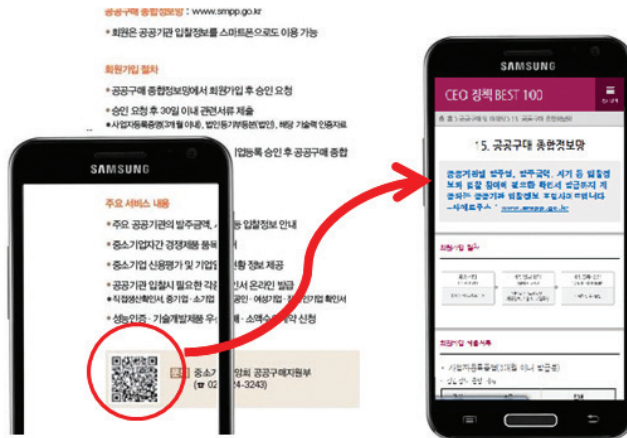
\* 관계부처 : 산업부, 미래부, 고용부, 병무청, 관세청 등 14개 부처

\*\* 중소기업 단체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5개 기관  
지원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보·기보, 창업진흥원 등 7개 기관



글로벌시장 진출, FTA, 공공구매, R&D,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인이 찾아보기 쉽게 10개 분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시책설명책자와는 차별화하여 수요자인 기업인의 시각에서 “신청자격·방법, 문의처” 등 알짜정보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 하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상세 정책정보가 수록된 「모바일 포켓북」으로 연동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신청자격·방법, 문의처 등의 알짜정보뿐만 아니라, 공고문, 각종서식 등 관련문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CEO가 원하는 정책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정책내용·연락처·관련서식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홍보 및 배포 경로를 마련하여 정책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핵심정책들을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체계의 마련으로 중소기업 정책인지도 및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상공인 상권분석 지원



## 사례

'13년 4월 수원에서 치킨집을 개업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은 A씨는 해당 지역 관련 개략적인 정보를 받았지만, 구체적 임대시세나 건축물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여러곳을 돌아야 했습니다.

'13년 10월 춘천시에서 미용실을 개업하려던 B씨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컨설팅을 받으며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인근 지역의 임대시세 전반과 출점 대상 건물 정보와 입지 특성까지 한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 국토부와 중기청이 손잡고 창업에 필요한 정보 종합 제공

사례의 A씨가 창업을 위해 직접 여러 곳의 부동산으로 발품을 팔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편하게 창업 예정지의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토부와 중기청의 정보공유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6년부터 소상공인 창업정보 제공을 위해 반경 100m~1.5km 이내 상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 운영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통계청 등 34개 기관의 DB를 활용하여 1,200개 상권에 대한 점포 현황, 유동인구, 매출정보 등 49종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월 평균 5만건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시세, 건축물 정보 등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시 상담DB 등 자체 자료에 의존하여 정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건축물자료, 임대시세 등을 제공받아 DB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3년 예정인 ‘공간정보 기반 서민 지원 플랫폼’\* 구축시 중기청이 보유한 소상공인 현황 DB를 필요로 했습니다.

\* 도로명주소 지도, 수치지형도 등의 ‘고품질 지도’ 기반 위에 서민 관심 지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공간 정보 등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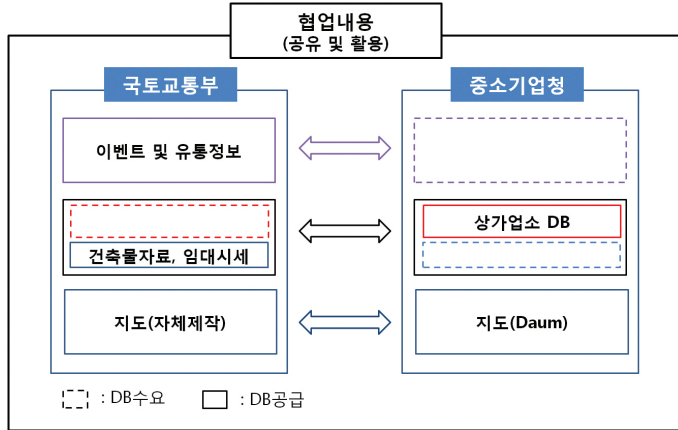
국토부와 중기청의 협업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1단계 : 기초DB 상호 공유)

### <제공정보 현황>

구분	국토부	중기청
제공정보	건축물대장 (약 700만건)	소상공인 상기업소DB(280만건) * 업종, 업소명, 주소, 연락처
	토지특성도 (약 16만건)	
	임대시세조사자료(분기별 3만건) * 빌딩정보 및 면적조사표 * 층별·임차인별 면적 및 임대료 공유임대시세	

- (2단계 : 공간정보 활용) 국토부는 중기청이 제공한 상가업소DB를 기반으로 업체정보(사진 등)를 추가한 이벤트 및 유통정보인 '관심지점DB'를 생산하고, 이를 중기청과 공유

### <협업 기본 개념도>



이렇게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이 보유한 DB를 공유하여 상권정보 시스템의 정확도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공간정보와 빅데이터가 결합된 고도화된 상권정보를 통해 창업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국토부 역시 '서민지원 플랫폼'에 상가업소DB를 제공하여 마켓플레이스(유통정보, 상품정보) 등 공간정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 정확도 : ('12년) 87% → ('13년) 89%

중기청은 국토부와와의 협업 외에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보유한 업체명(업종코드), 주소, 층수, 계약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등 기초DB를 확보해 상권정보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했고, 앞으로도 협업을 통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

## | 중소기업도, 직장맘도 속상한 육아문제 |

직장맘들의 풀리지 않는 고민은 바로 양육일 것입니다. 특히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직장일 경우 인근에 어린이집 등 영유아 돌봄시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현재 중소기업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부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기에 어려운 현 상황에서 영유아 돌봄시설을 갖추지 못해 기혼 여성 인재가 기피하게 된다는 것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 사례

직장인 A씨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아니면 이직자리를 찾아봐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얼마전까지 1살짜리 자녀를 돌봐주시던 친정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회사 근처에는 보육시설이 없고, 직장에서 1시간 거리인 집 근처 보육원에 하루종일 아이를 맡겨놓기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13년 6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14년 2월)」을 마련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왔습니

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현장의 여성R&D 인력 확충방안(13년 11월)」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의 여성 R&D 인력 확충을 위하여 기업집적 지역(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등)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하였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산을 위한 고용부·산업부의 collaboration

그러나, 두 부처가 각기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고용부는 장소선정 및 중소기업의 수요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산업부는 어린이집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 체계를 만들어 기업집적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추가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여성고용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산업부(산업기술정책과, 지역산업과)
<p><b>제도 소개, 설치 관련 컨설팅, 향후 설치·운영 비용 지원*</b>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설치비(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의 90% (15억원 한도) 지원, 운영비(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고시 금액 내에서 지원</p>	<p>각종 기업집적지역 담당자들과 <b>간담회 자리 마련*</b>,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b>컨소시엄의 구심점 구축</b>                      * '주요 기업 집적지역 간담회(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주제)', '전국 테크노파크 간담회(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주제)' 등</p>

'14.5~6월, 산업부는 '주요 기업집적지역 간담회(판교 테크노밸리, 대구성서단지 등)' 지속 개최하였습니다. 고용부(근로복지공단)이 참석하여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14.6월, 경기테크노파크 공동 직장어린이집 선정 및 향후 유사 모델 확산 관련 **고용부, 산업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추가로 3개소(테크노파크)를 설치하는 것에도 합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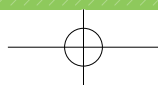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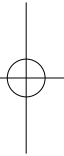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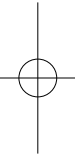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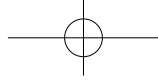
'14.7월에는 경기테크노파크 모델 전국 확산을 위한 '**전국테크노파크 담당자 간담회(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주제)**' 개최, 고용부(근로복지공단)에서 참석하여 현장 애로사항 청취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14.5~7월 사이에는 경기테크노파크 모델 전국 확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전국테크노파크 등에 설치 관련 컨설팅 제공하였습니다.



고용부-산업부 간 적극 협업의 결과, '경기테크노파크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제2차 공모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14.5.23.)되었고, 현재 설치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15년부터는 유아들을 선발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울산, 포항 테크노파크 등에도 올해 안에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애로사항인 설치·운영 비용을 고용부에서 지원하고,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 구심점이 없다는 문제를 산업부에서 지원하면서 산업단지 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의 테크노파크 및 산업단지 내 공동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면, 궁극적으로 산업단지 내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여성 인력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산업 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업  
우수사례집

# IV

## 행정 비효율은 가려! 유사·중복 잡는 협업

'지방하천정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  
다문화가족정책 실효성 강화  
국가표준체계 단일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청력정보 공동 활용

# ‘지방하천정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

## | 협업으로 하천정비 중복해소의 실마리 찾다. |

전국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토부와 환경부가 사업내용이 유사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07년과 2009년에 국토부는 하천정비, 환경부는 수질개선 위주로 사업영역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업 중복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협업’이 3대 국정운영원칙으로 정해지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부처간 협업활성화 총괄을 담당하였고,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협업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방하천사업 중복해소가 협업과제로 선정되면서 국토부·환경부와 함께 「하천정비사업 효율적 추진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업T/F를 구성·운영(13.6~)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707개소나 되는 사업에 대한 공중분석 및 공사구간 등을 비교분석해야 하며, 세사업별로도 사업목적·여건이 다양하고 공종이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 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 ● T/F 구성 현황

- \* 국무조정실 :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국토정책과
- \* 국무조정실 : 안전환경정책관실 환경정책과
- 기획재정부 : 국토해양예산과, 고용환경예산과
- 국토교통부 : 하천계획과
- 환경부 : 수생태보전과

그러나 Kick off 회의(6.10)를 시작으로 10차례의 공식회의와 실무조율을 위한 직급별 수시 미팅 진행하였습니다. 정확한 현황분석과 문제인식 공유를 위해 2007년과 2009년에 이루어졌던 양부처간 합의내용과 이미 양부처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지속함에 따라 2013년 8월에는 부처별 하천사업의 기본방향\*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 (국토부) 이·치수를 중심으로 종합적 하천정비 시행,  
(환경부) 이·치수적 기능이 확보된 구간에서 수질 및 수생태 중심의 하천복원 시행

또한 부처별 사업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14년 예산편성(안) 조정('13.9)이 이루어졌고, 근본적인 중복해소를 위해 '사업관리 지침(안)'을 마련('13.12)하여 국토부·환경부 간 공동 '지방하천 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 협약이 체결('14.2) 되었습니다.

## | 지방하천 사업,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

「지방하천 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 마련으로 양 부처의 하천정비 관련 사업 중복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국토부),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성격에 따른 신청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치수 기능 확보가 주 목적인 종합 하천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환경부는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되었거나 하천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서 수질 및 수생태 복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한 사업구간 및 연결 사업구간에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관련 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실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또한 하천의 이·치수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양 부처의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지방하천사업 추진시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검토토록 하여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양부처 사업현황(707개소) 등을 분석하여 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국토부는 이·치수(66.4%), 환경부는 수질·수생태(51.2%)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양 부처가 동일 하천에서 시행하는 중복사업이 존재(양부처 각각 8개소)하였습니다. 기존 계속사업 중

중복성이 높은 사업은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 조정 등을 통해 중복문제를 개선하여 89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요구한 신규사업 중 양부처 유사사업(9건)을 제외함으로써 897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총 98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양 부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치수 안정성 확보와 수질·수생태 복원 등 하천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토부-환경부 간 협업 성공 시사점



###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 제정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간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T/F를 구성·운영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부처별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시기·구간을 분리하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공동심사 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이를 양 부처에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한다.

2014. 2. 17.

국토교통부 장관

서 승 환

진결 제1차관 박기풍

박기풍

환경부 장관

윤 성 규

진결 차관 정연만

정연만

# 다문화가족정책 실효성 강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건수도 증가하여 연간 국제결혼 건수는 약 3만 건이라고(통계청 혼인·이혼통계) 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각 부처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국내외국인 ('13.9월)	동포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불법체류	기타
157만명 (100)	58.4만 (37%)	30.6만 (19%)	15만 (9.5%)	8.7만 (5.5%)	18.3만 (11.6%)	27.2만 (17%)

그러나 다문화가족, 이민정책, 외국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관계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각 부처가 칸막이 속에서 지원하다보니, 일부 사업은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자녀교육**: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거는—학교에서 갑자기 어떤 과제가 나왔을 때 진짜 이걸 부모가 딱 해줘야 하는데, 부모가 못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막막해요..도와줄 사람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 **다문화 정체성**: “다문화 가정이라는 혜택 받고 싶지 않아요, 애들도 다른 사람들이랑 차별화되는 걸 싫어하니까 하고 싶지 않고..”

- **차별 인식**: “이국적으로 생긴 큰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느날 제가 애기 데리고 A마트에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어머 너 아빠 안답아서 다행이다’ 이라는 거예요(외국남성과 결혼한 경우)”

\* 출처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2012)



이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사업 목적·대상·내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13.6~8월 동안 중앙 12개 부처 93개 사업과 전국의 지자체 1,229개 사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예산사업은 4개 부처에 집중(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되어 있고 '한국어교육, 방문자녀학습지도, 이중언어교육' 부분에서 유사·중복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3.7월에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합동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에서 11월까지 관계부처 유사·중복 사업 협의·조정을 거쳤습니다.

'13.9월부터 11월까지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마련 T/F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유사·중복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마련 T/F

-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국장급 공무원(정부위원)과 민간전문가(자문단)로 구성
  - 정부부처(7개) : 국조실,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안행부, 문체부, 고용부
  - 민간(자문단) :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 등

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개편에 따른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시설 종사자 및 현장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설명을 통해 현장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년 1월에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의견

- 부처 간 결혼이민자 통계 등 정보공유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과 연계가 중요함.
- 언어교육 및 민주시민교육과 연결하여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휴먼 서비스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체계와 연계하여 총체적·세부적으로 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마련으로 어느 정도 부처 간 중복문제가 해소되어 다행이고, 정책방향 역시 바람직함.
- 글로벌 시민의식, 다양성 교육 등을 통해 다양성 수용인식을 제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 지원 필요

그 결과 6개 분야 17개 사업 유사·중복사업 조정을 통해 사업의 차별성과 효율성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정책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 조정 결과

- ① **이중언어** : 언어영재교실(여가부) vs 이중언어강사 양성(교육부)  
⇒ **〈조정결과〉** : 언어영재교실(여가부)은 폐지하고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으로 전환, 이중언어강사 양성(교육부)은 “다문화 어울림 교육”으로 전환
- ② **이동돌봄·방문교육** : 방문자녀생활서비스(여가부) vs 대학생멘토링(교육부)  
⇒ **〈조정결과〉** : 방문자녀생활서비스(여가부)는 가정방문 소득구간별 차등화된 자기 부담금 적용으로 전환하고, 대학생멘토링(교육부)는 학교,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부진학생에 대한 기초학습 지원
- ③ **한국어 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법무부) vs 한국어교육(여가부)  
⇒ **〈조정결과〉** : 지자체로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역별 수요에 맞는 교육운영 및 어느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동일 인센티브 부여
- ④ **자조모임** : 다문화가족 자원봉사활동·자조모임(여가부),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법무부), 읍면동 생활멘토단(안행부)  
⇒ **〈조정결과〉** : 다문화가족 자원봉사활동과 읍면동 생활멘토단은 여가부 ‘자조모임’으로 통합하고, 법무부는 이민자네트워크로 전환
- ⑤ **콜센터기능** : 다누리콜센터운영·이주여성긴급전화(여가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법무부)  
⇒ **〈조정결과〉** :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이주여성긴급전화서비스(1577-1366)”를 통합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법무부)와 연계·협조체계 구축 추진
- ⑥ **초기적응** : 방문부모교육·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배치(여가부), 다문화정착지도사 교육(안행부)  
⇒ **〈조정결과〉** : 여가부 사업(방문부모교육·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사례관리사 등)은 점진적으로 통합, 정착지도사 교육(안행부)는 차별화 추진

# 국가표준체계 단일화

## | 표준이란? |

표준(標準)이란 특정 제품·서비스 등에 대해 표준화 기관에 의해 승인된 규정이라고 말하며, 특히 국가기관이 공인하여 제정한 표준을 국가표준이라고 합니다. 초기 표준의 시작은 산업이었지만 이후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 보안, 금융, 사회·윤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등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 전분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나은 세상, 차별없는 세상,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표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표준화 사례>

품질향상	단순통일화	호환성 제고	정보전달
 <p>형광등(&gt;8,000hr)</p>	 <p>부품 통일화</p>	 <p>교통카드</p>	 <p>공공안내 그림표지</p>

## | 이원적 표준 운영의 문제 |

세계적으로 표준체계는 '1국가 1표준' 운영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과 방송통신표준(KC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이 각각 국가표준으로 이원화 운영되어 왔습니다.

### <우리나라 국가표준 현황>

(2013. 12월)

국가표준	대상 범위	표준수	근거법	소관부처
KS	순산업	20,482종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부
KCS	방송통신	568종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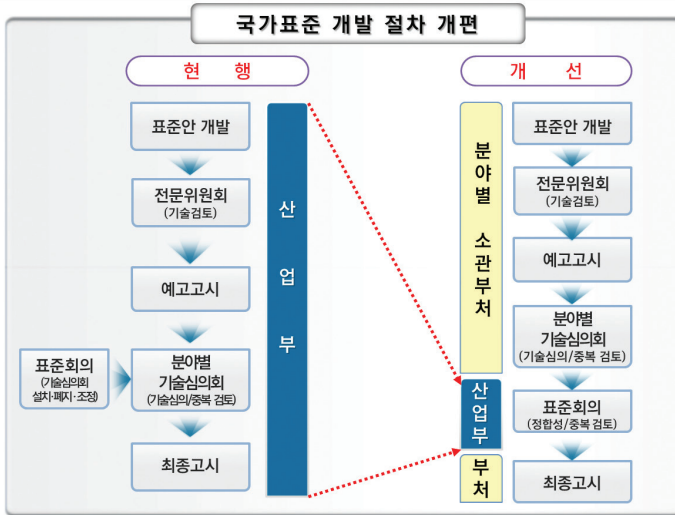
그런데 이렇게 많은 표준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체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산업표준과 방송통신표준간에 모바일 웹 표준 등 31건이 중복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도 발생했습니다.

## | 미래부-산업부간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양 부처가 공유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산업부의 입장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각 부처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13년부터 수차례의 협의회가 이어졌고, 국무조정실에서도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해 환경·의료·식품 등 분야별 표준의 개발·운영을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산업부가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및 총괄 관리하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방안'('14.5.8)이 마련되었습니다.



동 방안에 따라 산업부와 미래부는 산업표준과 방송통신표준의 명칭을 ‘국가표준’(KS: Korean Standards)으로 단일화하고 산업표준의 체계로 국가표준(KS)의 번호체계를 통합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 및 범부처 국가표준 총괄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 국가표준 비효율 해소

그 성과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산업표준(KS)과 방송통신표준(KCS) 간에 중복으로 운영된 31종의 표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발표(7.16)함으로써 중복표준 운영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혼란과 표준행정 비효율의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 <산업표준과 방송통신표준 통합>



오늘날 WTO·FTA 등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등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제표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1국가 1표준'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도입한 것은 그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향후 국가표준화 활동의 방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청력정보 공동 활용



“협업 전에는 일반인들이 검진을 따로 했어야 하기에 사회적 비용이 추가되었지만, 검증 정보 열람이 가능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어지고, 시민들이 따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 담당자

“국민들에게 질적 서비스가 향상되었고 편리성을 높였고, 기존의 닫혀 있는 사고에서 열린 사고로 변화되는 거 같기도 하며, 고정된 관념이 혁신, 탈피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서부면허시험장 적성검사 담당자



## | 적성검사만을 위한 신체검사, 국민불편으로 다가와 |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아실겁니다. 10년에 한번 하는 것인데도 적성검사 받으러 가는 것은 귀찮고 불편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범칙금을 내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신규발급응시자 및 적성검사(10년 주기) 대상자는 별도 신체검사(4~5천 원) 필요, 국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제출 또는 공동활용 사전 동의함으로써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 및 인지 부족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12년 적성검사자 317만명 중 건강검진결과서 이용자는 10만명(3.3%)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신체검사(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없이 면허 시험장 직원이 직접 시·청력정보를 열람·확인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제도가 개선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적성검사용 건강검진내역서 공동이용 필요성 논의('13. 1월)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보의 공동이용 필요한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스템 연계·개발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 건강검진 정보 활용 가능해져 한층 편리 |

관계기관(안행부, 경찰청, 복지부 등)간 긴밀협약('13. 2월)이 이루어졌고, 건강검진 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시력·청력 정보만을 추출·활용하는 방안 도출되었습니다. 3월에는 시력·청력 정보 공동이용 방안 기관간 협의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3월에서 7월까지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관계법령 개정도 있었습니다.('13. 7월) '13.8.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력·청력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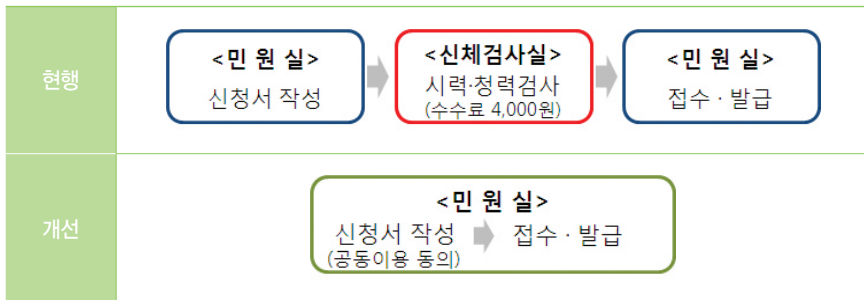
 <b>안전행정부</b>	 <b>보건복지부</b>	 <b>경찰청</b>	 <b>국민건강보험공단</b>	 <b>도로교통공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개발</li> <li>• 제도개선 총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용 승인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한 정보중 시력·청력정보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면허 시험장을 통한 공동이용 실시</li> </ul>



〈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

## 주요내용

###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절차(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 〉



신체검사 생략을 통해 민원인 편의제고 및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운전면허 소지자 2,800만명(전국민의 56%) 중 연간 약 300만명(신규 140만, 갱신 160만)이 개선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연간 161억원(신체검사비 4,000원 등)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청력정보 공동 활용은 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가건 강검진결과를 공동 이용한 최초 사례로서, 타 민원사무에도 공동이용 확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 협업 우수사례집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처	국무조정실
편집	기획총괄정책관(Tel. 044-200-2063)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인쇄·디자인	한디자인 Tel. 02-396-1392 Fax. 02-6008-1473

